

■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 북한붕괴와 통일외교 로드맵**



(김석우 외, 기파랑, 275쪽)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과 홍성국 전 통일부 협력기획관이 최근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제목으로 저서를 발

간하였다. 김석우 전 차관은 외무부 아주국장, 김영삼 전 대통령 의전수석 및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홍성국 전 협력기획관은 현재 통일교육원 객원교수,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및 북한사회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중이며, 북한경제와 통일경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사실 북한문제도 그러하지만 통일문제 자체도 태생부터 남북 간의 내부관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국제적 요소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태도 여하에 따라 통일 이후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지각변동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이들 국가들에 대한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모처럼 다가온 통일기회를 놓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과거의 정부가 햇볕정책 또는 화해협력정책의 이름 아래서 그랬던 것처럼 통일외교를 실종시켜서는 안 된다.” “요컨대 이 책은 북한붕괴가 다가오는데 대비하여 한반도 통일외교의 방향을 논의한다. 사실 한반도 분단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해 볼 때, 통일외교 강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난 시기 우리의 통일외교는 안타깝게도 왜곡된 대북정책과 맞물리면서 제동이 걸렸었다. 이 책이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위기를 위기로서 끝내지 않고,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되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는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한국 통일문제와 북한정세

제2장 급변사태로 치닫는 이상한 움직임들

제3장 독일, 분단에서 통일까지

제4장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동북아전략

제5장 통일기회 확보를 위한 한국의 4강 외교 방향

저자는 제1장에서 “남과 북이 말하는 통일은 용어는 같지만 가치와 이념이 상반되게 대립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의 목적과 개념,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른 것을 지향한다. 남한은 자유민주통일을 지향하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은 공산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 남

한은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무력에 의한 통일을 준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남한이 이른바 ‘햇볕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남과 북이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서 북한은 남한의 대북 ‘포용’을 악용하여 틈만 나면 자기식의 ‘자주 통일’을 외쳐댔다. 이것은 남한이 공산화통일에 동참하여 ‘우리끼리’ 통일을 이루라는 이야기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산화통일을 위해 남조선에 전쟁(무력)도 불사하겠다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햇볕정책이라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덫(?) 때문에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통일은 통일비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익도 함께 동반한다. 단순히 생각해서 아직도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지역을 개발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엄청나거니와 중국, 러시아, 유럽 등 광활한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통로를 얻는 점에서도 그렇다. 반면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은 사라지고 만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한반도에 있어서는 지정학적으로 통일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입증된 바 있다. (홍성국, 「평화경제론: 분단비용, 통일비용, 그리고 평화비용」) 통일이 실현되면 개인은 물론 민족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에 빨리 실현될수록 좋다. 그러한 ‘조기통일론’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통일기피론’으로까지 움츠러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통일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된다면, 통일 실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최근 한반도는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정세로 다가가고 있고, 백년에나 한번 있을 법한 통일의 기회는 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은 불행이라도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우리의 자세와 준비여하에 따라 유리한 통일 환경으로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분단의 고착화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는 현재의 정세변동에 능동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통일을 이루어야만 한다. 최근의 주변정세를 남의 일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현상에만 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칫 절호의 통일 기회를 잃어버리는 역사적 과오를 범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로 치달는 이상한 움직임들’로서 ‘김정일의 직할통치가 위험하다’ ‘김정일 건강 심상치 않다’ ‘김정일 후계체제는 급변사태의 적신호’ ‘화폐개혁도 체제유지 위한 마지막 몸부림’ ‘북한의 경제사회는 도저히 가망 없다’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 제3장에서는 2차대전 후 집권한 서독의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외교를 분석하고, 서독이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일통일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분단은 독일 분단과는 그 배경이나 속성이 다르다. 한국 분단은 냉전체제 하에서 미·소 간의 대결이라는

국제적 속성이 민족 내부의 좌우 이념대립과 결합된 산물이다. 전쟁 책임에 대한 추궁의 성격이 강한 독일 분단과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하지만, 국제적 속성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독일과 다른 점은 한국 분단의 국제적 속성이 국제정치상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한국 분단문제는 6·25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됨으로써, 한국 분단문제의 국제적 성격이 더욱 확대되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 역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안보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독일과 다를 리 없기 때문이다. 설령 북한이 급변사태로 통일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관계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통일 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마저 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보다 세련된 통일외교를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서독 통일외교의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독 통일외교는 우리 통일외교에 있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좋은 경험적 사례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4장에서 주변 4강의 한반도 전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지역 국가가 출현해 동북아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 이를 저지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붕괴 이후 이러한 국가적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상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동맹관계를 강조하며 한국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가 동북아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부추길 것이고 이것이 동아시아 안보질서 혼란은 물론 나아가 전 세계적인 안보질서 혼란으로까지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고 여긴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중·단기적 전략목표는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억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안보 부담을 가중시킬 어떤 사태의 발전도 원치 않고 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은 한반도 통일보다는 평화적 안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면, 미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 자국의 안보이익상 반대할 필요도 없다. 이때 통일은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안정적, 개방적이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안보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채 평화유지 능력을 갖춘 미국의 동맹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보장되는 통일이라면 미국도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미국이 안보측면에서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문제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가능성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이나 병력감축은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 군사기지는 유지되기를 원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중국의 세력증대를 우려하기 때문에 주한 미군 주둔

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은 물론이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안보이익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외안보정책의 원칙으로 반패권주의를 강조해 왔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 미국을 겨냥했다면 탈냉전시기에는 미국이 주 대상이다. 최근에 와서 중국이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경쟁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초점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 '영향력 확대' 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원하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국내적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불안이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 가장 큰 안보 부담이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셋째, 중국과 일종의 순치관계에 있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초래할 여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남북한 주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 역시 같은 분단국의 입장에서 통일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북한이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개입 아래 남한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 보다 분단의 현상유지가 훨씬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해 주변국들은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 이후 한반도가 적어도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외교적으로 분쟁지역에 대한 '불간섭주의' 나 '등거리외교'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자국의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적·군사적 능력을 추구한다는 목표아래 꾸준히 국방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위대의 증강 및 해외파병을 시도한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미국이 요구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본 자위대 역할의 확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중동이나 동남아로부터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한다는 경제적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정치·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조를 맞추어 나가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정책의 주된 관심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면서, 일차적으로는 한반도에 전쟁과 같은 위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며, 점차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분단문제를 관망하는 입장이며, 한반도의 통일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

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막연한 대비에 그치고 있다.

북한의 1998년의 미사일 발사, 2006년과 2008년의 핵실험, 여러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시켰으며, 2006년 10월 이후 취해지고 있는 일본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조치,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 강경자세 등은 일본의 안보위협 증대에 따른 일련의 대응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대국화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는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시작한 후 동북아지역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으로 간주해왔다.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목표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제고, 한·러 관계 발전을 통한 아태지역의 외교적 교두보 확보 등이다.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 북한 핵개발 저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남북한 등거리외교 등을 모색하는 것도 이러한 세 가지 목표 실현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의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 가까운 장래에 과거 소련이 누렸던 정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이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약화는 유사시에 다른 강대국들과 달리 한반도 통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 통일외교의 기본 방향은 '다자 안보' 보다 '양자 외교' 강화가 긴요하고,

능동적 통일외교를 전개해야하며, 통일이익의 국제성을 강조해야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곧 북한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고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한 붕괴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북한의 정권 붕괴나 급변사태 발생시 한반도 통일에 대해 국제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아무리 통일의 내적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제환경이 반통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국제적 기반을 유리하게 활용하면, 급변사태 발생과 같은 북한 내부의 불안 요인도 북한지역의 안정회복 단계를 넘어서 평화통일의 기회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 붕괴나 급변사태에 대응하여 주변4강은 통일보다는 소극적 의미의 '현상유지'에 훨씬 더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바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현상타파'의 분위기로 바꾸어나가야 하며, 이는 서독이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통일 기회 확보를 위한 4강 외교의 방향으로 신 한·미동맹과 한·일 공조의 확립, 미·중전략대화와 같은 경로를 통한 중국 설득과 우호적 한·중관계의 발전 및 미국·중국·러시아 등 3각 구도 하에서 적극적인 러시아 외교 전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 가장 협력적일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비해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자는 결어에서 “1989년 국민적 동의를 얻어 채택하였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점검하여 평화지향적인 통일현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급변사태(붕괴)에 대비하여 한국이 이를 통일 기회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4강 외교의 효율적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는 지역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여러 수준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이슈에 관한 대화와 협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전략이라는 로드맵을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의 차원에서 구상하고, 이속에서 주변 4강과의 대화와 협상을 순차적·교차적으로 연계시키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통일을 얻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모든 주민이 자유와 인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위기에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회가 들

어 있다. 한국의 적극적 통일 준비와 능동적 외교는 시대적 사명이기에 이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17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논의와 관련, “통일을 일찍 준비하면 비용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동일 통일세 논의와 관련, “통일과 관련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정책은 솔직히 분단 관리가 아니었느냐. 분단이 고착화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명하였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8월 22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세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는 바, 이와 같이 통일 준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본서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가 발간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 된다. 본서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계, 학계, 경제계, 언론계 및 일반 독자들에게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편집실-박창일) **외교**